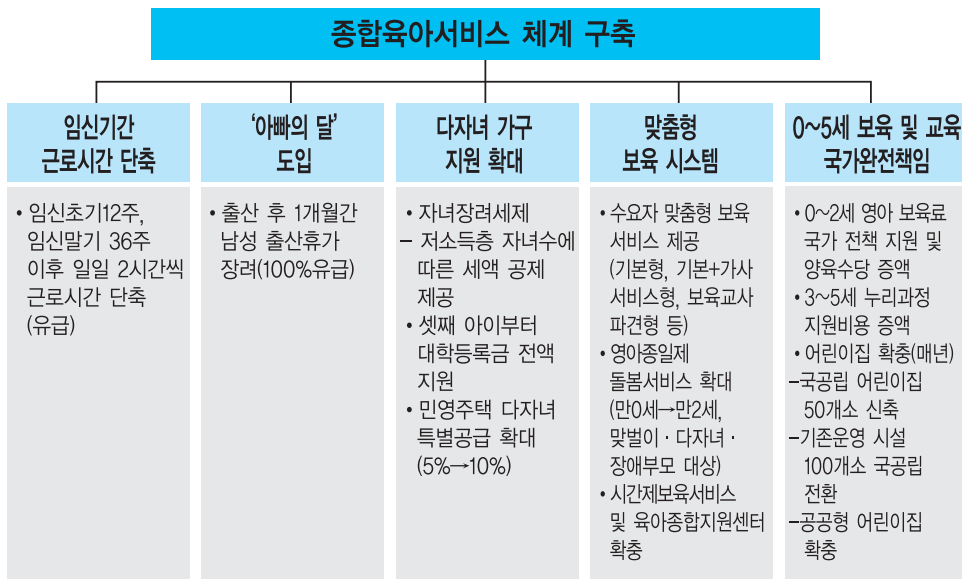


# 제18대 대통령 당선자 육아정책 공약

김혜진 연구원

지난 12월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. 당선 이전에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, '행복한 여성, 여성이 행복해지면 가정도 대한민국도 모두 행복해 집니다'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약속하였다. 실제로 당선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, 보건복지부 장관,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'0~5세 무상보육' 을 실시하기로

합의하였으며,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 4000억원(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)을 증액하기로 발표했다. 이로써 0~5세 전면 무상보육이 완성되었다. 대한민국에 첫 여성 대통령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포괄하는 육아정책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.



자료: 새누리당(2012).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, p 68.

(그림 1) 종합육아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

〈표 1〉 육아정책 세부공약

정책	세부 내용	실행방안
임신	<p>맞춤형 임신·출산비용 지원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</li> <li>-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</li> <li>- 난임부부 체외수정·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</li> <li>- 고위험 임신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</li> <li>-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</li> <li>-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</li> </ul>	-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
	<p>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위험 임신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</li> <li>- 국가가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,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신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</li> <li>- 고위험 임신부의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/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과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 운영</li> </ul>	- 2014년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
	<p>임신·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</li> <li>-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</li> <li>-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4년 분만 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및 산부인과 외래지원 사업비 확대</li> <li>- 2014년 예산 반영을 통해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추진 및 사업 지원</li> </ul>
	<p>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</li> <li>-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</li> <li>-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</li> </ul>	-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「근로기준법」 개정
출산	<p>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(3학년)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</li> <li>- 비정규직 여성의 '임신·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', '육아휴직 장려금', '대체인력채용장려금' 확대</li> </ul>	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
	<p>'아빠의 달'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'육아 휴직'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'아빠의 달' 도입</li> <li>- 30일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%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</li> </ul>	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
	<p>새아기 장려금 지급 (자녀장려세제 도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</li> <li>-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(부부)단위로 적용</li> <li>- 일정소득 이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,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</li> <li>- 단, 근로장려금(EITC)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%만 감액지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녀장려세제(새아기 장려금) 신설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</li> <li>-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실시</li> </ul>

(표 1 계속)

정책		세부 내용	실행방안
유아 교육 및 보육	0~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원전책임제 실현	- 0~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,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- 3~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·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-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- 민간시설의 보육·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	-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
보육	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	-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,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-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-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확충 유도 -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	- 2013년 예산 및 2014년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국공립·공공형 어린이집 확충
	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	-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△기본형(현행 아이돌봄미 파견) △종합형(기본형+가사서비스) △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-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(현행 만0세)로 확대하되 취업도(맞벌이 포함), 다자녀, 장애부모로 한정하고,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-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, 부모 상담,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-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 돌봄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봄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	-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「아이돌봄지원법」 개정 -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 - 2014년부터 예산 반영
다양한 가족	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	-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(찾아가는 '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' 파견사업) 실시 - 입국 5년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 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-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-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'다문화가족종합정보콜센터' 운영 활성화	-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초기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 지원
	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	-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-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 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% 미만으로 확대 -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확대 -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 서비스 제공 - 아이돌봄미,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	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 -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

자료: 새누리당(2012),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, 재구성